연구논단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정진성

* **지은이** |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빙교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나남, 2003),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개선조건』(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등이 있다.

1. 문제제기 : '재일–'을 둘러싼 호칭들의 경합

재일한인 또는 재일동포, 경우에 따라서는 재일한국인으로 불리는 사람들[1]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의 사람들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 조선적[2]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영어로 한다면 한국 출신 이주자라는 의미의 '코리안스 인 재팬'(Koreans in Japan)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들의 호칭은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외에도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 재일코리안(コリアン), 재일한인, 재일교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호칭에서 '재일'은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코리안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리안으로 표상되는 것은 때로는 국가이고 때로는 민족이다. 재일한국인과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만 해도 이 호칭에서 조선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믿는 사람, 분단 이전의 통일조국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선반도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선'은 다양한 의미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재일동포와 재일교포는 남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은 민족임에 근거한 호칭인 반면,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일과 재일코리안은 재일동포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면서 위와 같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측면을 지운다.

근대국가 형성 후에 이루어진 이주의 경우 대부분 출신국가의 이름으로 이주자들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 영국인 등등. 다른 한편

1) 이하에서는 특별한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아우를 때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2) 일본정부는 조선적은 국적이 아니며, 여기서 조선은 국명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부연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별 문제없이 동포 또는 교포로 부른다. 재미동포, 재중동포 등등. 그렇다면, 왜 하필 '재일-'의 경우에는 이주자들의 호칭이 때로는 국가를, 때로는 민족을 표상하거나 혹은 둘 다를 지워 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호칭을 둘러싼 혼란은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호칭들 속에서 민족과 국가가 표상되는 방식은 식민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각각의 호칭이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호칭들의 경합이 갖는 현재적 함의를 살펴보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역사적 조건들은 한국과 일본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위치 짓는 자기 해석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먼저 재일동포 등의 호칭을 둘러싼 갈등의 지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당사자,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사회, 관련 연구자들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호칭들을 통해 설명한 후, 호칭 사용의 혼란이 보여 주는 현재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재일동포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 그리고 신문 및 학술지에 나타난 재일 동포 등 명칭의 등장 빈도와 추이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분석 대상 자료와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주요 자료 및 연구방법
재일동포 자신	연구물 검토
일본정부	정부간행자료 검토
일본일반사회	『아사히신문』 기사 검색
일본연구자	국립정보연구소 정보제공서비스(CiNii) 통합검색
한국정부	국회도서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검색
한국일반사회	『조선일보』 기사 검색
한국연구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통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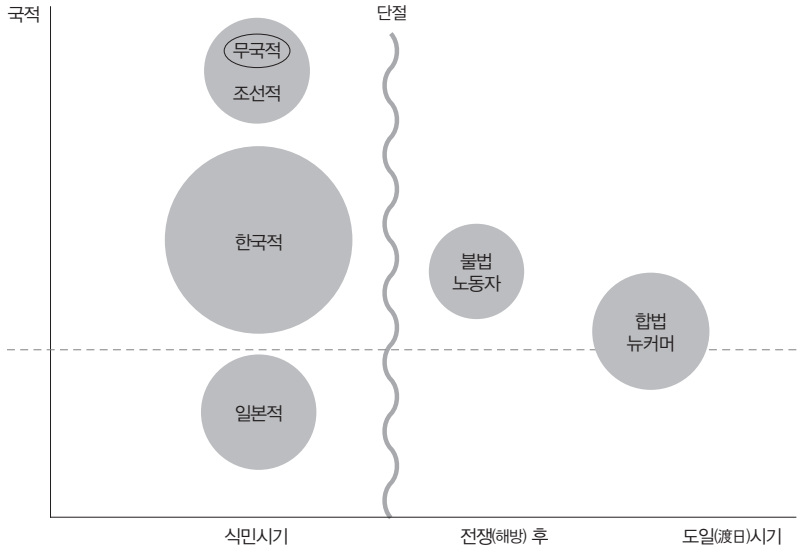
2. 재일동포 호칭 혼란의 쟁점과 배경

우선, 재일동포 호칭과 관련한 혼란에는 어떠한 쟁점들과 배경이 놓여 있나?

첫째, 일제의 강점과 분단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국가를 지칭하는 명칭에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은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조선'에서 '대한제국(한국)'으로 국명을 바꾸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제국주의를 경유하면서 식민지 '조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남쪽에 '대한민국'(한국)이 건국되었지만 남북은 각기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국가 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은 한국인, 북한 국적은 조선인으로 재일동포의 출신을 표현하면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분단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현재의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조선은 일제시기 국명이지만 현재 북한 국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제시기 이들이 조국을 떠나올 때 분단된 남북한이라는 현재의 국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은 두번째 배경, 한국 근대사의 굴곡과 함께 이루어진 이들의 복잡한 이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국적의 분화와도 연결된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집단이 거주국에 입국한 시기에 따라 집단의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국적에 따라 단절되는 몇 개의 집단이 존재하는 위에, 각기 다른 입국시기에 따른 구성이 더해져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하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대다수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특수를 맞았을 때부터 '조선'에서 직업을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과 제2차 세계대전기에 강제 연행된 사람들을 1세대로 하여 형성된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단절로 새로운 이주를 형성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20년의 공백 후인 1965년 일본과의 국교수립 후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으며 활발한 이주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공백기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재일교포들을 일제시기에 이주한 올드커머, 1965년 이후에 이주한 뉴커머로 부르기도 한다.

〈도표 1〉 재일동포의 구성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현재의 국적이 아닌 이들이 이주할 당시의 나라 이름에 따라 각기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으로 부르면 되는 것일까? 이 역시도 앞서 언급한 국명의 변화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올드커머 재일동포는 다시 크게 한국국적과 조선적 및 일본적 재일동포로 나뉘며, 조선적 재일동포는 심정적으로 북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과 분단 이전의 통일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무국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의 다소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이주 당시의 국적에 따른 분류 역시 마찬가지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 국적에 따른 분류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자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다수의 재일동포들이 3, 4세대에 이르도록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있다는 사실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재일동포의 수는 강제연행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일제 말기에 최고 규모를 보인 후 해방이 되자 대부분 귀국하고 60만 명 전후로 유지되다가, 이후 북송[3]과 뉴커머 이주, 자연 증감 및 귀화 등의 요소들이 상쇄되면서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국적 취득(귀화)은 1950년대

3)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3,339명으로 추산됨(민단 통계, http://www.mindan.org/kr/shokai07.php).

〈표 2〉 재일동포의 수 (단위 : 명)

연도	명수	연도	명수	연도	명수	연도	명수
1911	2,527	1936	690,501	1961	567,452	1986	677,959
1912	3,171	1937	735,689	1962	569,360	1987	676,982
1913	3,635	1938	799,878	1963	573,537	1988	677,140
1914	3,542	1939	961,591	1964	578,545	1989	681,838
1915	3,917	1940	1,190,444	1965	583,537	1990	687,940
1916	5,624	1941	1,469,230	1966	585,278	1991	693,050
1917	14,502	1942	1,625,054	1967	591,345	1992	688,144
1918	22,411	1943	1,882,456	1968	598,076	1993	682,276
1919	26,605	1944	1,936,843	1969	607,315	1994	676,793
1920	30,189	1945	1,115,594	1970	614,202	1995	666,376
1921	38,651	1946	647,006	1971	622,690	1996	657,149
1922	59,722	1947	598,507	1972	629,809	1997	645,373
1923	80,415	1948	601,772	1973	636,346	1998	638,828
1924	118,152	1949	597,561	1974	643,096	1999	636,548
1925	119,870	1950	544,903	1975	647,156	2000	635,269
1926	143,798	1951	560,700	1976	651,348	2001	632,405
1927	165,286	1952	535,065	1977	656,233	2002	625,422
1928	238,102	1953	575,287	1978	659,025	2003	613,791
1929	275,206	1954	556,239	1979	662,561	2004	607,419
1930	298,091	1955	577,682	1980	664,536	2005	598,687
1931	311,247	1956	575,287	1981	667,325	2006	598,219
1932	390,543	1957	601,769	1982	669,854	2007	593,489
1933	456,217	1958	611,085	1983	674,581	2008	589,239
1934	573,695	1959	619,096	1984	687,135	2009	578,495
1935	625,678	1960	581,257	1985	683,313	2010	565,989

출처 : 1911~2005년까지는 민단 웹페이지 (www.mindan.org), 2006~2011년은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

〈표 3〉 재일동포 귀화자 수

년도	귀화수	년도	귀화수	년도	귀화수	년도	귀화수	년도	귀화수
1952	232	1964	4,632	1976	3,951	1988	4,595	2000	9,842
1953	1,326	1965	3,438	1977	4,261	1989	4,759	2001	10,295
1954	2,435	1966	3,816	1978	5,362	1990	5,216	2002	9,188
1955	2,434	1967	3,391	1979	4,701	1991	5,665	2003	11,778
1956	2,290	1968	3,194	1980	5,987	1992	7,244	2004	11,031
1957	2,737	1969	1,889	1981	6,829	1993	7,697	2005	9,689
1958	2,246	1970	4,646	1982	6,521	1994	8,244	2006	
1959	2,737	1971	2,874	1983	5,532	1995	10,327	2007	
1960	3,763	1972	4,983	1984	4,608	1996	9,898	2008	
1961	2,710	1973	5,769	1985	5,040	1997	9,678	2009	
1962	3,222	1974	3,973	1986	5,110	1998	9,561	2010	
1963	3,558	1975	6,323	1987	4,882	1999	10,059	합계	296,168

출처 : 민단 통계[http://www.mindan.org/kr/shokai07.php].

이후 차츰 증가하다가 1995년 이후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표 3〉 참조), 이를 통해 아직도 수 세대를 거쳐 조선적,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이들의 이주시기와 국적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일제시기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한국적, 조선적 모두 포함)에게 특별영주자격이 주어져 있으며,[4] 그 밖에 한일 수교 후 한국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여 정착한 사람들은 일반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한두 세대에 걸쳐 곧바로 현지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출신국이나 출신지역, 민족명으로 별 갈등 없이 불린다. 일본계 칠레인, 베트남 출신 한국인 등등. 이와 비교할 때, 일제시기에 이주한 조상으로부터 이루어진 2, 3, 4세대의 한국국적, 또는 조선적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매우 복합적이고 예민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귀화한 재일동포들의 입지 역시 간단치 않다. 1947년 일본정부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하며 국적란에 '조선'을 기입한 후, 한국국적으로 바꾼 사람들, 북한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 떠나올 때의 조국 조선을 자신의 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재일동포를 구성하면서 귀화하지 않고 한국적,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을 둘러싼 복잡한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을 넘고 일본국적 취득자까지도 포함하여 한반도 출신들이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함께 하는 일본 내 재일동포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넷째, 일본사회의 폐쇄적 특수성 역시 재일동포의 귀화를 가로막으면서 명칭 혼란의 배경으로 작동한다. 일본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가 사람들의 정신에 내재해 있고,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역사가 근대를 통해 강화되어 현재에도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사회의 한국을 비롯한

4) 올드커머 중 특별영주자가 아닌 사람들(밀항자 출신 집안에서 지금도 '정주자'라는 자격으로 사는 경우 등)도 있다.

아시아 타국민에 대한 차별은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많은 재일동포들은 '귀화는 곧 동화'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이들의 귀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국적에 따른 호칭 사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5)]

3. 재일동포 자신의 호칭 사용 변화

해방 직후 재일동포들은 일제시기에 자신을 부르던 방식인 조선인으로 스스로를 호칭했다. 이는 남북한 분단과 정부 수립 후 여러 명칭으로 분화되어 갔는데, 이러한 재일동포 자신들의 호칭 사용 분화를 남북한 정부와 밀착된 민단/총련과 재일동포 일반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해방 직후 식민지 '조선'의 연속: '재일조선인'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시기 재일동포들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맥락 속에서 대부분 '재일조선인'으로 자신들을 호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재일동포들은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 재일본조선인민거류동맹 등 300여 개의 단체를 결성했는데, 이러한 단체를 규합하여 전국적인 통일단체를 만들기 위해 1945년 9월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 중앙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모체로 1945년 10월 조련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때 재일(본)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이들 스스로를 호칭하는 데 사용되었다.[6)]

조련의 좌경화에 반대하여 새로운 단체를 설립한 중립 및 우파민족주의자들도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조련의 결성에 반대하여 우파적 민족주의자들

5) 재일동포 3, 4세를 면담한 김숙자에 따르면, 그들은 "남이든 북이든 민족을 나타내는 국적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나 일본 국적은 싫다" "일본이 식민지 역사를 사죄하고 국적을 자유선택하게 되었을 때 (귀화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7, 31~32쪽, 41쪽).

6) 조련은 차츰 좌경화되어 1949년 일본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는데, 이후 1951년 친북적 입장을 재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재일조선총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었고, 1955년 친북한 단일 체제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로 재탄생되었다. 1950년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가 조직한 조국방위원회(조국방위대로 개편됨)는 총련 결성 후 해산되었다.

은 1945년 11월 16일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하 건청)을 발족했고, 무정부주의계 및 민족주의적 중립파들도 1946년 1월 20일에 신조선건설동맹(이하 건동)을 결성했으며, 건청과 건동을 비롯한 군소 32단체들은 반공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1946년 10월 3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세웠다. 이 단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했다가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으로 다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7)]

이와 같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정부 설립 이전 시기, 재일동포들은 자신들을 재일조선인으로 호칭했다가 1948년 후 호칭이 분화되었다.

2) 민단과 총련: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한국과 북한 정부와 각각 관련 있는 민단과 총련은 국가의 이름을 명확히 나타내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두 단체 모두가 재일동포의 호칭을 함께 혼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과 직결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두 단체가 동시에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는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공히 사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1978년 민단 중앙본부에서 발행하는 『차별백서』에서는 '민단은 1948년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재일한국인의 권익옹호를 기한다"는 조항을 강령의 하나로 포함시켜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민단의 홈페이지에서는 같은 강령을 "재일동포의 권익옹호를 기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민단 홈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재일동포라는 용어가 더 자주 눈에 띈다.[8)] 1981년 『차별백서』는 책 전체에서 재일동포와 재일한국인을 혼용하고 있다.

한편 총련은 단체명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라고 명확히 명칭을 드러내고 있지만, 총련에서 발행하는 문서들에는 재일조선인과 함께 재일동포라는 용어가

7)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9월 8일 재일동포의 유일한 공인단체로서 인정받았으며, 같은 해 9월 2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1994년 4월 20일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했다. (http://www.mindan.org/kr/)

8) http://www.mindan.org/kr/jigyo01.php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일조선인운동과 동포들의 생활에서……”,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9]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민단과 총련은 각기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가** 이름을 명확히 하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3) 재일동포 사회에서 호칭의 분화

해방 이래 재일조선인으로 자신을 불러 왔던 재일동포 중 일부가 한국정부 수립 후 재일한국인으로 호칭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후 남북한의 분단과 그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 재일한조선인 등으로 그 호칭이 분화되어 갔다. 여기서 분화라고 함은 시기에 따른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재일조선인 등의 명칭이 쓰이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명칭들이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재일동포 호칭 역시 시기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의 학자가 일생을 통하여 사용한 재일동포 관련 호칭을 살펴봄으로써 흥미로운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모모야마(桃山)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재일동포 연구를 했던 서용달 교수의 경우를 보면, 1970~1972년에는 재일동포, 1972~1977년 재일한국인, 1977~1992년 재일한국조선인(간혹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동포도 사용)을 사용하다가, 1992년 9월 11일 일본매일신문에서는 재일한조선인으로 통일할 것을 제창한 후, 계속 이 용어를 사용했다.[10]

한편 재일학자 강재언은 1996년 출판한 한 권의 책에서 재일, 재일동포,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명칭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나온, 재일동포를 다룬 재일동포 3, 4세들의 사회학, 인류학 분야 학위 논문들에서도 나타난다. 필자가 참고한 석사학위 논문 여섯 편을 보자. 「1990

9) 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総聯』, 1991.

10) 徐龍達先生還暦記念委員會, 「徐龍達先生教育研究業績」, 『アジア市民と韓朝鮮人』, 日本評論社, 1993, 725~749쪽.

년대 이후 '마당운동'과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총련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와 조선학교」('재일동포'도 사용),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정체성」,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재일동포'도 사용), 「다문화 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 재일조선인 청년단체(KEY)의 활동을 사례로」 등이 그러하다.[11] 논문 작성자들이 2000년대 중후반 서울에 유학 왔으니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재일동포 3, 4세의 젊은 학자들인데, 이들에게서 재일조선인(2명),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등의 호칭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은 여기에 재일한국인, 재일 등을 더해서 보다 광범위하다.

이와 같이 재일동포 자신이 부른 호칭은 재일조선인에서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을 거쳐 재일코리안으로 변화하는 느슨한 흐름이 존재하면서도, 그 각각의 호칭이 나름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 중 '재일동포' 호칭이 그 흐름과 입장들을 관통하면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

①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 민족 혹은 국가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일조선인'은 일제시기에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그 후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역사성을 지닌 존재[12]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호칭이다. 그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바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13] '조센진'이라는 놀림과 차별을 기억하는 재일동포들은 바로 이 차별

11) 김요자, 「1990년대 이후 '마당운동'과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4 ; 김광섭,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5 ; 손애경, 「총련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와 조선학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6 ;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7 ; 강철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8 ; 김겨레, 「다문화 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 재일조선인 청년단체 KEY의 활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9 분석 결과이다.

12)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 재일조선인 청년단체 KEY의 활동을 사례로」.

13)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비평』 겨울호, 1998.

을 직시하기 위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의 역사성에 주목한다. 서경식은 "일본사회에서 '조센진'으로서 차별 당해 온 우리들은 그 부당함에 저항하고 자기 자신과 민족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야말로 감히 '조선인'이라고 칭해야 하지 않을까?"[14]라고 주장한다.

'재일조선인'에서 '조선'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라는 국가와 혼동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다른 호칭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호칭만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수립과 함께 한국 국적자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일한국인 호칭이 병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유사한 일본의 학술정보서비스인 국립정보연구소 정보제공서비스(CiNii)에는 1952년에 처음으로 재일한국인이라는 호칭이 나타난다.[15] 그러나 이때 '한국인'은 한국 국민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재일한국조선인': 분단 상황의 반영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이 남북한 국적에 따라 분리되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그리고 남북한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재일한국조선인' 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언제 어떤 계기가 이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1970년대 초반인 것은 확실한 듯하다. 재일동포 윤건차 교수[16]는 1973년 10월에 창간된 잡지 『계간 마당』에 '재일한국조선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말하는데, 노이리 나오미(野入直美)[17]는 외국인 등록시의 국적 항목이나 지자체의 행정용어로서 '한국조선'이 사용된 것이 일본사회에 '재일한국조선인'이 정착된 계기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립정

14)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15) 権一天, 「在日韓國人對策樹立の急務」, 『共通の廣場』, 獨立評論社, 1952. 1(5).
16) 尹健次, 『在日を考える』, 平凡社, 2001.
17) 野入直美 外, 『多文化教育における'日本人性'の實證的研究』, 龍谷大學, 2007.

보연구소의 정보제공 서비스(CiNii)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5년 잡지 『세카이』(世界)[18]이며, 그 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나 인권문제에 관련한 논문에서 이 호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비판이 역시 제기되었다. 민족분단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호칭이라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는 요즈음 '재일한국조선인'이란 기묘한 호칭이 정착해 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족분단 상황의 반영인데, 당사자인 재일동포가 이러한 호칭을 아무런 의문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19]

③ '재일',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 이주의 현재성

강상중, 박일, 윤건차 등 대표적인 재일동포 학자들은 자신들을 '재일'로 부른다.[20]서경식은 "'일본에 살고 있는'이라는 상태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애매함이 우리 민족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이며 또한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답답함을 덮어 버리기 때문인지 이 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재일이라는 용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21]

앞서 언급한 국립정보연구소 정보제공서비스(CiNii)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표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1년인데[22], 1990년대에 들어서 그들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다루는 글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한 젊은 재일동포 연구자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이란 어휘 자체가 갖는 불우함의 인상 때문에 '재일코리안'으로 자신을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23]

앞서 살펴본 대로 민단과 총련에서 모두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여러 호칭을 사용하는 재일동포들이 '재일동포'를 동시에

18) 宮田浩人, 「國內にみる朝鮮政策の歪み—在日韓國朝鮮人處遇問題」, 『朝鮮政策の轉換を求める』, 1965.
19)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20) 강상중, 『재일 강상중』, 삶과 꿈, 2004; 朴一, 『在日という生き方』, 講談社, 1999; 尹健次, 『在日を考える』.
21)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22) 田口純一, 「在日コリアン研究の成果と問題點」,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1981, 81.
23) 김광섭,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경식[24]은 "재일동포를 총칭해서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글 전반에서 '재일동포'와 '재일조선인'을 같이 쓰고 있다. 즉 '재일동포'를 다른 어떤 호칭의 경우에도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다.

4. 재일동포에 대한 호칭 사용의 변화

1) 일본의 재일동포 호칭 사용

식민지 강점과 함께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일반적 통칭은 조선이다. 북조선, 남조선이 널리 쓰이다가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남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북조선'은 아직도 북한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재일조선인'이 아직도 일본사회에서 주류적인 통칭인 것이다. 이로부터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이 새롭게 부상하다가, 최근 '재일코리안'이 차츰 자리를 넓혀 가고 있다.

① 일본정부

일제시기에 한국의 명칭을 조선으로 부르던 일본정부는 1947년 외국인등록령 시행규칙(1947. 5. 2) 별기(別記)등록신청서 양식 내 주의사항 제3호에 "국적란에 대만인 및 조선인은 대만 또는 조선으로 기입한다"고 설명했다.

1948년 한국과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인'과 '조선인'을 분리하여 호칭하며, 함께 지칭해야 할 때는 한국·조선을 병렬하여 사용한다.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재일한교(韓僑), 재일한인을 거쳐 1965년 한일국교 수립 후부터 재일한국인으로 호칭을 정착시키고 있다. 한일 양국이 서명한 1951년 '재일한교 법적지위문제위원회', 1952년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

24)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통권 35호. 1996.

에 관한 한일협정안'에서 한국적 재일동포에 대한 호칭이 재일한교와 재일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에서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일동포를 명명하고 있는데, 이 협정을 설명하는 일본정부의 관료들의 글들에는 '재일한국인'이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다.[25]

조선적 동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류외국인통계는 외국인 통계의 범주에서 한국/조선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26] 그러나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조선은 국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의미한다. 최근 재일동포를 지칭할 때는 남북한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입장을 피하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의 호칭을 혼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재일한국인 집주지역의 하나인 가와사키(川崎) 시의 한 보고서에서는 "전후부터……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철폐, 전후 보상 문제……"라고 쓰고 있으며,[27] 사카이(堺) 시도 외국인 통계에 '한국 및 조선'을 한 범주에 넣고 있으나 여기서 조선은 국적이 아니라 조선반도 출신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명기하며, 이들을 지칭할 때는 '재일코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28]

요컨대 일본정부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과 혼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한국조선인, 코리안 등 남북한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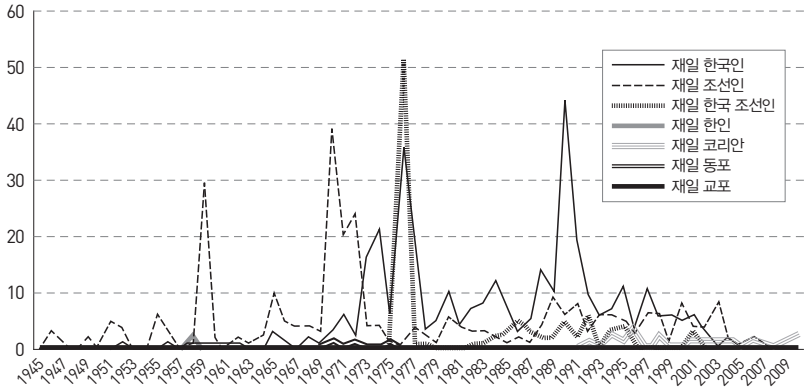
25)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참사관이었던 다츠미 노부오(辰巳信夫)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과 출입국관리특별법"(『법조시보』 18권 3호)을, 당시 입국관리소장 야기 마사오(八木正男)는 "재일한국인의 처우에 관하여"(『국제문제』 1965년 5월호)를 발표했다(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6) 財團法人 入管協會, 『平成5年版 在留外國人統計』, 1993.

27)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統計から見た川崎市内の外國人』, 1992, 2쪽.

28) 市民人權局市民生活部區政課, "2006年 제3절 사회적 특성, 2.인구"(http://www.city.sakai.lg.jp/city/info/_kanribosai/hogoplan/1-4-3.html)/ 堺市, 「龍谷大学 李洙任教授からいただいたご意見」, 2006년 중 '……재일코리안이 지역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차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도표 2〉 일본사회의 재일동포 명칭



출처 : 1945~1983 기쿠조(聞藏)II VISUAL『아사히신문』축쇄판. 1984~2010 아사히신문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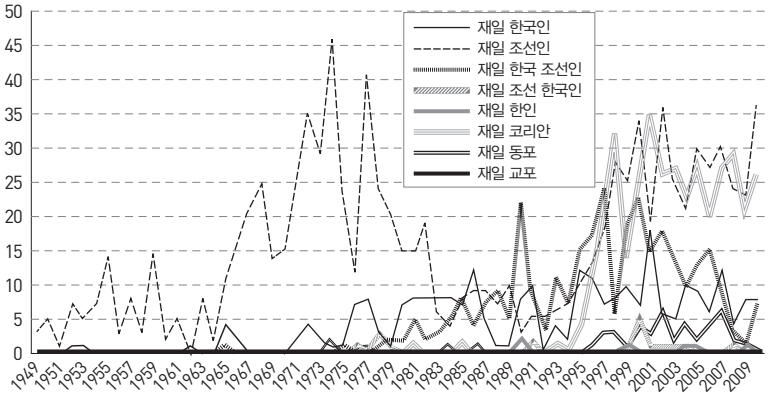
② 일본사회 일반

남북한 관계에 예민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경향이 일반사회에서도 1970년대 이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표2〉의『아사히신문』기사검색 결과는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해방 후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었던 '재일조선인'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재일한국인'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여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재일한국인'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1976년에 재일한국조선인/재일한국인 용어가 돌출한 것은 이 해에 NHK방송에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의 서명운동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사를 통해 명칭 등장 빈도가 많아진 데다가 관련 시리즈물이 게재되었기 때문이다.[29] '재일한국조선인'은 1976년 일시적으로 두드러졌다가 재일동포들의 논의에 영향을 받으며 차츰 사라졌다. '재일한국인' 기사가 1991년 크게 증대한 것은 일본외상의 한국 방문과 한일각서의 결착이 이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30]

29) NHK한국어 방송은 강좌 명칭을 둘러싸고 '한국어'로 할지 아니면 '조선어'로 할지 진통을 겪은 후 결국 8년 후인 1984년에 한국어도 조선어도 아닌, 문자를 지칭하는 '한글 강좌'를 채택, 강좌명을 '안녕하십니까, 한글 강좌'로 하였다.

30) 이 한일각서에 따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인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에서 재일동포 2세까지만 인정했던 영주권을 3세 이하까지 대대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조선적 동포도 여기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을 특별영주권자라 부른다.

〈도표 3〉 일본연구자들의 재일동포 호칭



출처 : CiNii (http://www.cinii.ac.jp) 논문 검색

③ 연구자

일본정부와 신문사는 한일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호칭 사용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일본의 연구자들은 재일동포 자신이 사용하는 호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CiNii를 검색해 본 결과, 대체로 재일조선인 용어가 해방 후 지금까지 전 시기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 수립 후 '재일한국인'이 등장했으며, 한일수교 후 그 사용 빈도는 점차 늘어나서 이후 꾸준히 재일동포 연구에 등장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재일한국조선인'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도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31] 이와 함께 아주 적은 빈도이지만 '재일조선한국인', '재일조선인한국인'을 사용하는 연구도 간혹 나타났다.[32] 1990년대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그 사용은 1990년대 중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재일조선인과 함께 재일동포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31) 福岡安則, 『在日朝鮮人·韓国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1993.

32) 黒川洋治, 『在日朝鮮·韓国人と日本の精神医療』, 批評社, 2007 ; 福岡安則, 『在日朝鮮人·韓国人』.

2) 한국의 재일동포 호칭 사용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호칭은 '재일동포', '재일교포'이다. 연구자들 중에도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다른 호칭을 쓰면서도 '재일동포'를 여전히 함께 쓰는 연구자들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단지 '동포'나 '교포'만으로 부족하며 여기에 국가나 민족의 함의가 포함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 연구가 많지 않고 1990년대 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호칭의 분화 역시 이 시기 이후에 찾아볼 수 있다.

① 한국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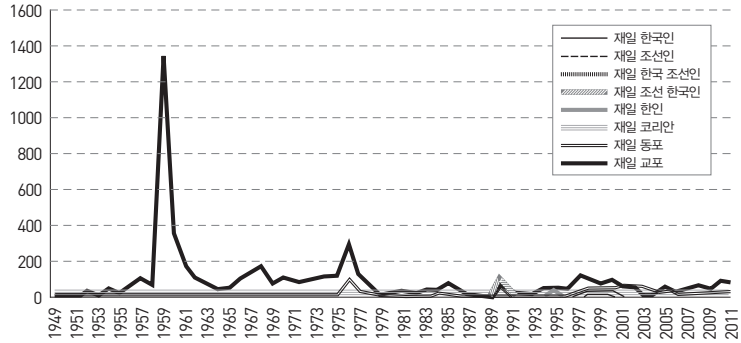
한국정부가 재일동포를 호칭한 기록은 앞서 일본정부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서명한 1951년 '재일한교 법적지위문제위원회'와 1952년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일협정안', 그리고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한국정부의 재일동포 공식 호칭이 '재일한교'에서 '재일한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재일한국인'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58년 한국 외무부에서 발행한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설명서)'를 보면 '재일한교', '재일한인', '재일한국인'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문서의 제목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이며 목차에도 제1장 제1, 2, 3차 회의의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위원회토의개요, 제2장 예비교섭과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면 제1장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의 '재일한교 법적지위문제위원회 토의개요, 제2장 예비교섭과 재일한교 법적지위문제'로 바뀌어 있다. 제1장에서 제1차 회담을 설명하는 논의에서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1쪽), "재일한교 문제에"(2쪽)로 시작하다가, 4쪽부터는 "재일한국인은 대일평화조약 발효로써……", "재일한국인의 국적은……", "재일한국인의 일본국적 취득은", "재일한국인의 일본 내 영주권 허가에 관하여는……" 등으로 '재일한국인'이 등장하다가, 다시 20쪽부터는

"재일한인에 영주권을 부여하되……", "재일한인의 생활보호조치……", "재일한인의 국적……" 등 '재일한인'이 사용된다. 제2장 제목은 이미 언급한 대로 '재일한교' 법적지위문제로 쓰여졌는데(33쪽),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 설명에는 '재일한인'이 다시 사용된다. 이어서 1958~59년 '제4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1961~64년까지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관계회의'가 열렸다. 그 밖에 1965년 재일교민 지원, 1956~65년 재일한국인 유골봉환이라는 외교문서가 보인다. 이상 다소 장황한 논의로부터 1965년 이전 한국정부는 재일동포를 호칭하는 말로 재일한교, 재일한인, 재일한국인을 혼용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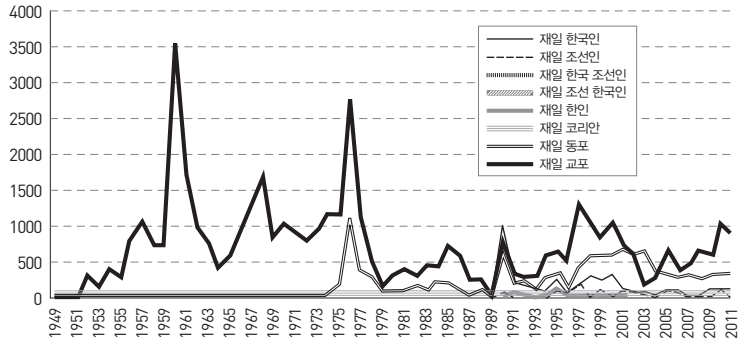
한국정부는 앞서 언급한 대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일동포를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세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1967년과 1969년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문제', 1967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문제', 1966~67년의 '재일한국인의 유골봉환', 1969년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일 간 법무장관 회담' 등과 같은 많은 외교문서들이 '재일한국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33] 그러나 다른 한편 1966, 1969, 1970년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1969~1970년 '재일한인 유골봉환' 등과 같이 '재일한인'을 계속 사용하며, 1967년 '재일교민 북한송환', 1970년 '재일교민 김희로사건', 1969~70년 '재일교민 현황' 등과 같이 '재일교민'을 사용하는 외교문서, 1977~79년 '재일본교민 김희로 사건' 등과 같이 '재일본교민'을 사용한 외교문서도 볼 수 있다. 1977~79년 문서 '재일본한국인 유골봉환',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와 같이 '재일본한국인'도 등장한다. 그 밖에 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재일교포', '재일동포'를 사용하는 문서들도 출판되었다. 요컨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재일한국인' 사용 경향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일한인'이 함께 사용되었고, '재일교민', '재일본교민', '재일교포', '재일

33) 이하의 외교문서는 국회 전자도서관 DB(http://www.nanet.go.kr) 상에서 2010년까지 공개(1948~1979년 생산)된 마이크로자료의 문서목록을 통해 검색했다.

〈도표 4〉 조선일보 기사검색에 나타난 재일동포 호칭, 1949~2011



〈도표 5〉 조선일보 기사검색에 나타난 재일동포 호칭, 1949~2011(1959년 제외)



동포', '재일본한국인'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소식을 전하는 현재 외교통상부 웹페이지에는 '재일한국인'과 '재일동포'만이 등장하여, 차츰 이 두 용어로 정착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재일조선인' 또는 '조총련교민', '조총련계 재일교민', '조총련계 재일본교민', '조총련계 재일본동포'으로 호칭했으며 간혹 '재일교민'으로 일반화시켜 부르기도 했다.

② 한국사회

『조선일보』 기사검색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재일동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인, 재일코리

안 등의 호칭 등장 빈도를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재일동포를 가리키는 호칭은 대부분 재일동포와 재일교포인 것을 알 수 있다. 1949년 이후 여러 용어사용 빈도수를 보여 준 〈도표 4〉에서, 1959년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다른 해의 빈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1959년 수치를 1958년과 같은 수치로 보정하여 그린 그림이 〈도표 5〉이다.

이 도표들에서 볼 수 있는 대로 1950년대 초까지 '재일동포'만이 사용되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교포'는 거의 전 기간 가장 사용빈도가 높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일동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여 '재일교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 '재일교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등의 호칭이 나타나지만 극소수이다. 일본에서 일반인과 연구자 모두가 사용하는 재일코리안, 재일한국조선인 등과 같은 호칭은 한국 신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재일동포는 '재일동포', '재일교포'로서 충분히 지칭될 수 있는 것이다.

1959년에 엄청난 등장 빈도를 보인 '재일교포' 기사는 이 해에 시작된 재일동포 북송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 시기 전후 몇 해의 높은 빈도 역시 이 북송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약, 1972년 7.4공동성명과 1974년 문세광 사건 등이 재일교포 기사를 증가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며, 1991년에는 일본 외상의 한국 방문과 조선적을 포함한 재일동포 3세 모두에게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게 된 한일각서의 체결로 인해 기사 내 호칭 등장 빈도가 늘어났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재외동포법[34]의 설립은 기사 증대의

3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의 제정 시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즉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많은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2002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4년 법의 개정 시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또 다른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교포'와 '동포' 용어의 의미를 짚어 보자. 1965년 한국정부는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일본과 맺었는데, 여기서 재일교포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직계비속'을 일컫는 것이었다. 한편 1997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들의 정의에 따르면 교포는 한국 국민을 의미하며 동포는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교포와 동포가 심각한 의미 차이를 인식한 채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위키백과(wikipedia)에는 '한국계 교민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규모는……'이라고 설명되어 교포와 동포를 사실상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과 한국정부가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이나 재외동포법에서도 '동포'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는데도, 여전히 교포라는 용어가 신문기사에는 더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은 두 용어가 별 의미 있는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까지 '재일동포'만이 사용되다가 1950~60년대를 통해서 '재일동포'는 사라지고 '재일교포'만이 사용되다가, 1970년대 다시 '재일동포'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재일교포', '재일동포'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변화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한다.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명칭 사용의 경향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35]

35) 조선일보의 재일동포 관련 사설을 분석한 권혁태는 해방 직후 민족적 열의에서 사용되었던 재일동포라는 용어가 1950년 한국전쟁 후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재일교포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1970년대 중반 동포가 다시 사용된 것은 경제적 시점에서 회유·통합의 필요성이 한국사회에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 왔는가」, 『역사비평』, 2007, 통권 78호).

③ 연구자

한국사회 일반인들이 주로 '재일동포', '재일교포'를 사용하는 동안, 재일동포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인, 재일코리안 등 일본에서 사용되는 모든 호칭들이 다각적으로 사용되며 증가해 왔다. 재일동포에 관한 신문기사의 빈도가 특정 사회적 계기에 따라 증감의 큰 폭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호칭이 재일조선인과 재일코리안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 연구자들의 사용하는 호칭은 다양하다. 학술정보연구서비스 (RISS)의 통합검색을 통해 한국 연구자들의 호칭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문기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재일조선인'이 전 시기를 통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일제시기 연구자들이 그 시기 재일동포를 재일조선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36] 앞서 본 대로 재일동포 자신들이 이 호칭을 그들의 차별경험을 직시하는 역사성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사용하는데, 이 점을 존중하는 학자들이 '재일조선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37] 앞서 본 대로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일본연구자들 또는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은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들을 편집하여 책을 펴낸 김광렬은 여러 호칭 중에서 "'재일동포'도 무난하기는 하나 …… 그들의 특이한 입장도 반영하여 객관성을 띤 총칭으로서 '재일조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의 서문에서 말했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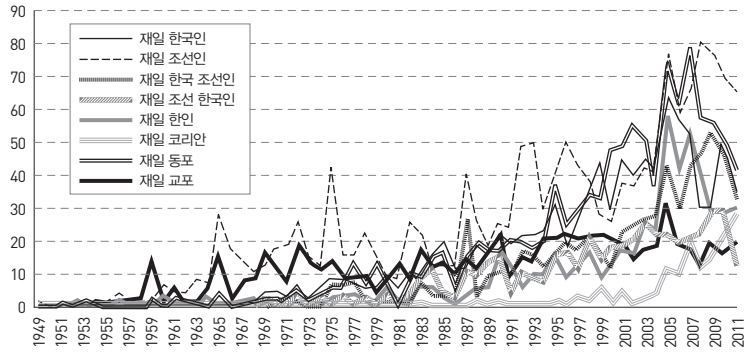
둘째, 사회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일교포'가 196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재일동포'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일

36) 김광렬, 「책을 펴내며」,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37)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 왔는가」; 한영혜,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총』 제27권, 2008 ; 권숙인, 「일본의 전통, 교토의 섬유산업을 뒷받침해 온 재일조선인」, 『사회와 역사』 제91집, 2011.

38) 김광렬, 「책을 펴내며」.

〈도표 6〉 한국 연구자들의 재일동포 호칭 사용



출처 :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통합검색

교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재일동포'는 곧바로 '재일교포'를 앞질러서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재일조선인'과 함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되고 있다. 학문적 엄밀성으로 보아 국적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하는 '교포'는 국적이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는 재일동포에게는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호칭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재일동포'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39] 강덕상(재일학자), 김광렬, 정인섭, 김태기, 윤건차, 정진성, 최영호 등 15명의 재일동포에 대한 연구자들은 1999년에 재일학자 박경식을 추도하여 출판한 논문집의 제목을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라고 붙였다. 각각의 논문들 안에서는 재일한인, 재일조선인 등 서로 다른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재일동포는 이를 묶는 기반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김광렬 편집의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한일민족문제학회, 삼인, 2003)의 책에 각기 한 장의 집필을 담당했던 김태기와 최영호는 다

39) 김태기, 「분단의 갈등을 넘어 통일의 민족단체로」,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 최영호, 「재일동포는 선거권이 없다」,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 이승우,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의 제한과 분쟁해결」,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2005 ;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일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 2005 ; 정진성, 「민단-총련 관계의 변화 :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탐색」, 『사회와역사』 제82집, 2009.

른 연구에서 재일한국인 호칭을 사용해 왔던 연구자들인데, 이 책에서 재일조선인을 사용하지 않고 재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셋째,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재일한국인 호칭이 한국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부터 연구에서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재일한국인'은 1980년대 이광규, 김상현 등 이 분야의 대표적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며 1990년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관련 한국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일조선인' 사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일한국인' 사용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최영호, 김태기 등 대표적인 재일동포 연구자들은 위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40]

넷째, '재일한인'이 상당히 무게 있게 자리 잡혀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일한인 호칭은 1990년대 들어 자리를 굳혔으며, 2000년대에는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재일동포·재일조선인·재일한국인 호칭들과 함께 재일동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일동포 관련법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정인섭은 1996년에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라는 대작을 출판했는데, 1999년에 제목의 "재일교포"라는 호칭을 "재일한인"으로 바꾸었다. 장인성, 권숙인, 정진성 등 재일동포 관련 연구자들도 '재일한인'을 여러 국적의 재일동포를 총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했다.[41] 이전에 재일조선인 호칭을 사용하던 김광렬은 최근 연구들에서 '재일한인'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는 2010년 출판한 저서에서 "'재일조선인'은 해방 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이니치초센진'(在日朝鮮人)이란 일본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므로, 일본어 '재일조선인'을 한글사용권에서는 '재일한인'이라고 번역표기해도 무방하다"고 다소 중립적으로 말했었지만, 최근 필자와의 면담에서는 재일한인이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뉴커머 재일동포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적합한 호칭이라는 보다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40) 이광규, 『재일한국인』, 일조각, 1983 ; 김상현, 『재일한국인』, 한민족, 1988 ;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41) 장인성,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2003 ; 권숙인,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2008 ; 정진성, 「재일한인 뉴커머 형성과정과 집주지역의 특징」, 『사회와 역사』 제90집, 2011.

마지막으로 일본 연구자들이 '재일조선인'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 사용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5. 결론 :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앞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재일동포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호칭들은 역사성과 현재성에 있어서 각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호칭은 역사성에서, 또 다른 호칭은 현재성에서 의미를 가지면서도 각기 한국의 역사와 남북한 분단 등의 조건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호칭들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재일조선인' 호칭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정당성과 적합성이 지지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일본으로 향할 때, 한반도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제시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조센진'으로 불리며 차별당했다. 그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아직도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은 이와 같은 역사성이 담지된 호칭이다. 둘째, 일제시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후 그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조선'이라는 국적을 부여받았고,[42] 그후 일본정부는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 조선반도라는 지역을 뜻한다고 해명했다.[43] 재일동포는 처음부터 모두 재일조선인이었으며, 자신

42) 해방 후 일본에서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재일동포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등록하도록 되었으며 그때 국적란에는 '조선'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으며, 일본정부도 이때 '조선'은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50년 한국정부가 국적란에 '한국'을 명기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한 답변에서도 재차 확인되었고, 1965년 10월 26일 일법무성견해(日法務省見解, 외국인등록증상의 조선적 중 '한국' 또는 '조선' 기재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국인등록 시 '조선'이라는 기재는 재일조선인의 국적 변경의 특수사정상 일본 영토였던 한반도에서 도일한 조선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어떠한 국적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43) 현재 일본정부 기관인 '재단법인 입관협회'가 발행하는 『재류외국인통계』에서도 '한국조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것은 단지 국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예컨대, 목차에 "국적(출신지)별 재류자격", "국적(출신지)별 직업, 성별 외국인등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財團法人 入管協會, 『平成5年版 在留外國人統計』).

이 국적을 한국 또는 일본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조선'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은 역사적 적합성도 있다. 셋째,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재일동포들이 통일된 조국으로서 '조선'을 상정하며 자신들을 '재일조선인'으로 호칭한다는 점이다. 즉 여기서 '조선'은 현재의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조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호칭의 이러한 역사성은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동시에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 서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허점이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은 일본제국주의가 근대화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의 노력을 무화시켜서 부여한 이름이기도 하다. 둘째, 해방 후 일본정부가 그들에게 '조선'이라는 국적(지역)을 부여했으나 그후 국적란의 조선이 한반도라는 지역을 가리킨다고 한 해명과, '조선'은 국명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통일조국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셋째, 북한과 혼동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44]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점은 재일동포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일본 통용의 이름에서 벗어나려고 한 여러 노력들의 의미와 역사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일한국인' 호칭의 역사적 정당성과 적합성을 찾아보자. 식민지 '조선'을 통치했던 일본정부가 '조선'이 국명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한편, 일단의 재일동포 자신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재일조선인'을 호칭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대한제국(한국)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또 다른 숙고를 보자. 고대로부터 한반도를 칭하는 이름에는 '조선'(단군조선, 기자조선, [이씨] 조선 등)과 '한'(韓 : 마한, 삼한, 대한제국 등)이 모두 등장한다. 1392년부터 500년간 이씨 조선왕조가 지속되었다가 이후 1897년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

44) 역사적으로 일본사회에서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어 그 역사성이 인정된다 해도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면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그것을 바꿀 것을 제안해야 한다. 그것은 재일사회, 일본사회에도 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실천의 예를 '일본군위안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종군위안부'로 불리우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여성들을 지금도 일본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로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무심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990년대 초에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종군'의 자발성의 의미를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로 호칭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및 일본인 연구자, 활동가에서까지 정착되고 있다.

국으로 개칭하며 근대화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면서 일본제국주의는 칙령으로 대한제국의 국호를 폐지하고 국호에 대신하는 명칭으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 잡지를 모두 압수하고 철저하게 '한'(韓)이라는 말을 없애고자 했다.[45]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의해 빼앗긴 한국의 이름을 되살리는 것의 정당성이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의 경우, 재일동포 전체가 아닌 한국적의 동포로 혼동되어 조선적 동포와 귀화 동포를 빠트리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제 합병 전 '우리'의 공식 국명이며 현재 한국에서 '한국'이 합법적인 한반도의 국가 명칭이므로 재일동포들을 '재일한국인'으로 통칭하고, 북한계 또는 총련계를 앞에 붙여 '북한계 재일 한국인', '총련계 재일 한국인'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보다 정확하게, 일제시기의 상황을 논의할 때와 해방 후 조선적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재일조선인'으로, 한국적 동포는 '재일한국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잡한 재일동포의 구성을 통합하고자 일본에서 1970년대에 쓰기 시작하여 1990년대 정점을 이룬 후 차츰 없어지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한조선인' 호칭에 대해서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두 나라의 명칭을 병렬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이와 같은 호칭은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가가 같이 드러나는 방식을 피하여 '재일'과 '재일코리안'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재일코리안'은 외국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 적절한 호칭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소 타협적인 입장에서 '재일'의 호칭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하다는 점이 비판된다.

또 한국에서는 재일동포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일한인'을 사

45) 橘内尙子,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イテイ : 在日文學から見えてくるもの』, 明治學院大学 論文, 2006, 16쪽.

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중국,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재외한인'으로 통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1950년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명한 외교문서에 '재일한인'이 등장한 적이 있으므로 역사적 맥락이 독특한 재일동포들에 있어서 한국적 동포만을 지칭한다고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은 일본과 재일동포들 사이에서도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의 갈등을 피해서 다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으로 선택되기도 하는 것 같다. NHK에서 한국어, 조선어의 분쟁을 피해 한글로 프로그램명을 정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는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이 개인의 신조, 소속단체,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 시점에서 재일동포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 준다는 취지로 역사자료관이 설립되었는데 그 명칭을 놓고 장기간 고민하다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으로 작명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볼 수 있다. 이 자료관은 재정문제로 결국 민단이 그 책임을 지고 일본한국대사관 내에 설립되기는 했지만, '재일한인' 호칭을 고수한 결과로써, 실제로 민단이나 총련 소속뿐만 아니라 중립적 동포, 귀화한 동포, 재일동포나 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전문가 등 다양한 층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한겨레신문』, 2010.1.6.).

위에서 논의한 재일동포에 관한 여러 호칭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시각으로부터 그 사용의 근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들에서도 몇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다. 재일동포를 포괄하는 호칭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남북한의 어느 한쪽으로 호칭을 통합할 것인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이라는 호칭에서조차, '조선'은 일제시기 이들이 출발한 조국 '조선'을 의미하며,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압살된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재일동포를 추상적인 범주, 또는 이론적이거나 당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다. 호칭을 통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뿌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표상하고자 하는 각기 다른 시도들은 재일동포를 일본에 의해 규정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행위자로서 주목하고 있었다.

험에 주목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창조적 관광부흥에 성공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자숙 붐, 장기적인 관광정책의 미흡, 장기화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행착오에 주목한다면, 관광부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동일본대진재, 재해관광, 오쿠시리, 한신, 니가타, 우스산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 정진성

투고일자: 2012년 5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 재일코리안(コリアン), 재일한인, 재일교포 등 '재일-' 이주자들을 지칭하는 어휘는 다양하다. 때로는 국가, 때로는 민족 혹은 양자를 표상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호칭들의 의미와 혼란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본 연구는 재일동포 등의 호칭을 둘러싼 갈등의 지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어휘 등장과 사용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당사자, 정부, 한국과 일본의 사회, 관련 연구자들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호칭들의 의미, 호칭 등장의 역사적 배경, 호칭을 둘러싼 긴장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호칭들 속에서 민족과 국가가 표상되는 방식은 식민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조건들은 한국과 일본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상하는지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위치 짓는 자기 해석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호칭이 담고 있는 현재적 함의와 인식은 그 역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세계화와 일본의 기업별조합 | 우종원

투고일자: 2012년 6월 18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세계화의 진전 속에 일본사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에 대한 일본의 기업별조합을 대응을 분석하고, 기업별조합이 양극화를 저지하고 못한 이유와 그런 행동이 조합 자신에 초래한 귀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화에 대해 일본기업은 투자 확대나 이노베이션 강화보다는 코스트삭감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기업별조합은 스스로 기업통치의 한 축을 담당한 때문에 이런 기업행동을 용인하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적

Disaster Recovery and Creative Tourism Policy _ CHO Ara

This paper began by questioning how tourism might contribute to the disaster recovery in Japan, and asking what the "creative" tourism of Machizukuri is in light of its emergence in the disaster's aftermath. A disaster can be an opportunity for the existing society's many-sided problems to be directly addressed and resolved. This paper examines the precedent natural disasters and their relief/recovery efforts after the 1990s, and analyzes the first year of recovery since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order to look for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above. Japan has experienced many natural disasters, and have dealt with many trials and errors in its recovery efforts, and in doing so Japan has reformed its recovery scenario in every turn. Therefore, there is a good reason for understanding the Japanese experience in their disaster recoveries. Will Japan succeed in its creative tourism recovery after the earthquake? In the present moment, the long-lasting popularity of self-restraintism among the Japanese populace, along with the stagnant inadequacy of the government's tourist policy, and the seemingly unending Fukushima nuclear accident do not brighten the future outlook. However, if the precedent disaster recovery efforts' trials and errors are considered and how they have improved in their efforts every time, the possibility of Japan's recovered tourism still remains open in the future.

Keywords :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tourism, Okushiri, Hanshin, Niigata, Mount Usu.

The Historical Consequence and Contemporary State of Phraseology Concerning Koreans in Japan _ JEONG Jin Seong

Throughout modern history, Koreans residing in Japan have been called by names such as Japan-residing Hankookin, Japan-residing Josonin, Japan-residing Overseas Compatriot, Japan-residing Hanin, Japan-residing Hankook Josonin, Japan-residing Korean, etc. These names have been given either by the Korean-Japanese themselves, the Korean or Japanese people, as well as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These names often stress their affiliation with state, nation, or sometimes both. However, in

some cases, the names, as given by the Korean-Japanese themselves, show an attempt to hide or delete such affiliation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reasons behind such attempts and the phraseology of the terms that are used.

The author investigates the points of conflicts and disputes in the phraseology in the context of their historical consequence and contemporary status. This work will show how various ways of phrasing the Korean-Japanese identity have been closely connected to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on Korean Peninsula. Such polit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have decided how Korean and Japanese people and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represented Koreans in Japan. These conditions, in turn, affected the perception of self-identity among the Koreans in Japan. Hence, the implications of current status of phraseology should also be du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its historical consequence.

Keywords : Japan-residing Hankookin, Japan-residing Josonin, Japan-residing Overseas Compatriot, Japan-residing Hanin, Japan-residing Hankook Josonin, Japan-residing Korean

Globalization and Enterprise Unions : The Paradox of 'Employe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_ WOO Jong W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polarization made rapid progres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enterprise unions dealt with the impact of globalization, why the unions could not stop the polarization, and what the result of union behaviors to the unions themselves would be. Japanese Companies chose their strategy which was not accelerating invest or innovation, but reinforcing cost-cutting, which brought about the decrease of regular workers, the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earnings differentials as a result. The enterprise unions that comprised with stockholders important stakeholders of corporations tolerated this kind of behavior. However, the cost cutting strategy and the following practices of employment/compensation management might lead to the erosion of workshops' Kaisen-Power through putting an obstacle to smooth communication and taking workshops of time to carry out the Kaizen plans, as seen in the case study of A-Company.